

# 광주시, '3대 특구' 개발 통해 미래산업 선도한다

### 기회발전·도심융합·교육발전 선정 AI·미래차 등 육성...도심 복합개발 기업 유치·인재양성·정주여건 박차 "지역경쟁력 강화·새 도약 발판으로"

광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정에 이어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에 따라 지정됨에 따라 이들 특구 개발을 통해 미래산업을 선도하는데 박차를 가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특구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미래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체계적인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 직주락(직장·주거·여가 집약) 복합개발 등 지역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미래산업 선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월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이어 이달 6일 기회발전특구, 7일 도심융합특구에 신규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광산구 빛그린국가산

단 68만6797㎡(20만7000평)와 북구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52만3560㎡(15만8000평)가 지정됐다. 광주시는 빛그린국가산단을 '모빌리티특구'로, 첨단3지구를 '인공지능특구'로 각각 키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 주도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구역이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제공되며, 기업 유치, 첨단 인프라 구축 등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지방 주도의 특구 개발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지역 이전을 촉진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한 균형발전이 목표다.

모빌리티특구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미래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전장부품 및 2차전지 등 미래차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인공지능(AI)특구는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핵심인

프리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 융복합 서비스를 실증·구현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서구 상무지구 일대가 지정됐다. 광주시는 도심 인프라를 활용해 복합개발을 유도, 상무지구를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된 젊고 매력적인 혁신플랫폼 공간으로 조성한다. 특구는 국·공유지 사용료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감면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우선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광주시는 민자와 시비 등을 포함 총사업비 1조5790억원을 투자해 상무지구 일대 85만2693㎡ 면적을 도심융합특구로 개발한다. 또 인근 9만1298㎡에는 특구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도심융합특구에는 △스마트 첨단 특화사업 △의료·디지털 융합사업 △연구개발(R&D) 혁신사업 △마이스(MICE)·문화 융복합 사업을 추진한다. 특구 연계사

업으로는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상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진행 중이고 광주 의료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구축도 계획돼 있다.

광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특구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토지보상 등을 추진해 오는 2031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을 위한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3년간 광주시, 교육청 등에서 7531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광주형 AI 인재성장 사다리 연계를 통한 AI·디지털 인재양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 강화 등이 목표다.

광주시는 대한민국 유일의 인공지능(AI)사관학교, AI영재고등학교, GCC 사관학교 등 광주만의 특색있는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기업과 지역 대학과 협력 교육사업인 광주과학기술원(GIST)-삼성 계약학과는 물론 광주시의 초·중·고·대학으로 연계되는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사업은 실제로 기업 유치에 효과를 내고 있다. 최근 에이직랜드 등 반도체 설계기업의 광주 유치를 성공시키는 한편 233개(11월8일 기준)에 달하는 AI 관련 기업이 광주 투자를 결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강기정 시장은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발전특구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 인재양성, 정주여건 마련 등에 온 힘을 쏟겠다"며 "이는 광주의 새로운 도약 발판이 될 것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내일이 밝는 기회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전남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확대

### 어항배후 상·공업지역 어업인 포함 연 130만원...22일까지 읍면동 접수

전남도가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을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 거주 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오는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직불금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상업·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수산직불제법 개정·시행에 따라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어가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에서, 어선원 직불금 신청은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 관할 읍면동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올해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금 대상으로 1만3572여 가를 선정하고 총 15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추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어가에는 2025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과 실천단 등이 지난 9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대자보 도시 공동이행 협약식'에서 '광주시민의 다짐' 선언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상·하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 ↑ 가정용 누진제서 단일요금제 전환

광주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오는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월평균 상수도 800원, 하수도 560원) 인상한다. 또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8월20일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결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부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5종을 동결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했다.

다만,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광주시 상수도요금은 지난 2017년 인상 이후 7년 간 동결돼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하수도요금은 처리비용의 65%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인상된 요금을 재원으로 2025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167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진행하고, 136억원을 투입해 배수지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수조로 사업 10억원을 투입하는 등 상수도 시설투자에 나선다.

하수도 시설투자의 경우 2025년 영산강과 광주천 등 하천 수질개선에 필요한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63억원, 우·오수관 분류식화 사업 419억원, 싱크홀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153억원, 자치구 노후하수관 등 정비 55억원, 도시침수 예방사업 86억원 등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4㎡(톤)을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은 월평균 800원, 하수도 요금은 월평균 560원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 가정용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적용했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체제로 전환한다.

가정용의 경우 1단계(1~20㎡) 사용량이 전체의 96%를 차지해 누진제의 실효성이 낮고, 다인 가구(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요금체제로 전환한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대·자·보 도시' 공동이행 협약식

### 시민실천단 100여명 참여

광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광주'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대자보 도시 광주 시민속의 및 공동이행 협약식'을 열어 시민들과 함께 사람 중심의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박필순 광주시의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 한가운 어린이 등 대·자·보 도시 시민실천단 1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대자보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담대한 정책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실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실천단을 모집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대자보 도시 광

주' 실현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공동 추진, 시민실천단의 '시민제안서' 이행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교통체계 전환을 위해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시민제안서와 행정 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대자보 도시'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민공감 정책 실행 계획 3+1을 추진하며, 실증공간 조성, 대자보 도시 공론화, 시민 주도 기획 및 실천 등의 요소를 결합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서포터즈 홍보전

전남도는 최근 서울 포스코센터와 대한전선주식회사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및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 기간 수도권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홍보하고,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100만 명 조기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사육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전남도 연말 감사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등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호반그룹(호반건설·대한전선주식회사) 8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임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현장에서 기부 실천 및 서포터즈 가입에 동참했

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9월 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음식점, 숙박업 관련 도내 7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250여 개였던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할인가맹점 개수를 500여 개까지 확대했다. 전남도는 2026년 6월까지 가맹점을 3000개소로 확대하고, 정보제공 플랫폼을 다양화하는 등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 혜택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둔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